

중소기업 특화 AI기반 신기술 R&D에, 500억원 이상 지원...AI 고도화 예타 추진

발행일 : 2020.05.06

정부가 중소기업의 인공지능(AI) 신제품 고도화를 위한 500억원 이상 규모의 대형 연구개발(R&D) 사업을 추진한다. 내년부터 시범 사업을 반영하는 동시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늦어도 2022년부터는 본 사업에 착수하는 것이 목표다. AI를 비롯한 4차산업혁명 전략 기술분야에 대한 예산 투입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소기업기술정보원(이하 기정원)은 AI기반 신제품 R&D 고도화 및 예비타당성조사 연구 수행을 위한 사업자 모집에 들어갔다. 기정원은 연구용역을 통해 AI R&D사업 대상 중소기업군의 기업 현황을 조사하고 발굴 기업의 기술수요와 예산 규모를 파악해 예비타당성조사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가 이번 예타를 추진하는 이유는 앞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AI R&D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서다. 중기부는 올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AI기반 고부가 신제품 기술개발사업 R&D 사업을 총 149억원 규모로 실시하고 있다. 지난 3월 75억원을 투입해 25개 기업을 선정했고, 7월부터 나머지 74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앞서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에서 밝힌 대로 AI는 모든 산업과 연결되는 범용기술이고 산업 전반 혁신을 좌우하는 핵심 수단인 만큼 R&D 수요를 충분히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이번 용역을 통해 중소기업의 AI기반 신제품 R&D가 시급한 분야와 수요 등을 파악하고 장기 차원에서 정책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파악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AI 관련 핵심기술 보유현황, 기업규모, 수출액 특성 등 주요 중소기업의 전반적인 현황에 대한 파악도 이뤄질 예정이다.

실제 통상 예타 추진 과정에서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규모와 상위 정책과의 연계성, 관련 사업의 차별성·연계·협력 방안 등을 들여다본다. 5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지원에 따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중기부 관계자는 “사업 예산 규모와 범위는 추가 연구를 통해 정하게 될 것”이라면서 “시범사업을 우선 개시한 이후 본 사업을 시작할지 여부 등은 연구 과정에서 조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예타 조사를 시작으로 중기부 차원의 R&D 지원도 대형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중기부는 AI 고도화 예타 외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 관련 예타를 진행 중이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그간 중소기업 분야에 대한 정부의 R&D 지원은 소액 살포식으로 이뤄진 경향이 있었

다”면서 “중소기업·스타트업 혁신을 위해 필요한 분야를 선정해 집중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